독립보고메커니즘(IRM)

실행계획 검토:

대한민국 2023~2027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목차

섹션 I: 2023~2027 실행계획 개요 3

섹션 II: 대한민국 2023~2027 실행계획 유망 공약 6

섹션 III. 방법론과 IRM 지표 15

부속서 1. 공약별 데이터 18

부속서 2: 실행계획 공동생산 20

섹션 I: 2023~2027 실행계획 개요

실행계획에 행정심판 재결, 정부 데이터 접근성,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유망 공약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외의 공약들에는 열린정부 성과를 낼 명확한 잠재력이 부재하다. 이번 실행계획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4 개년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보다 야심찬 공약 목표 설정과 공약 목표의 열린정부 관련성 강화를 위해 실행계획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4 년간 이행될 대한민국 제 6 차 OGP 실행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다. 실행계획은 반부패, 디지털, 시민참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 개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의 공약 5, 7, 8, 9, 10 은 사회적 포용이라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이러한 공약의 대부분이 열린정부 가치와의 관련성이 적다. 명확한 성과 잠재력이 있는 공약은 30%(이전 실행계획의 경우 71%)에 그치고 있다.

국가 다중이해관계자 포럼인 열린정부위원회(Open Government Committee, OGC)가 공동생산 과정을 주도하였고 행정안정부 차관과 한국투명성기구에서 공동 의장을 맡았다. OGC 구성원이 확대되어 학계 및 민간부문 대표가 포함되었으나 시민사회 대표 비율이 이전 공동생산 때보다 줄었다. 실행계획 수립 이후 2024 년 2 월, OGC 는 주로 정부, 학계, 민간부문 대표로 축소되었고 시민사회 대표는 한 명뿐이었다.[1]OGC 가 공동생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실행계획 수립 과정은 OGP 참여 및 공동생산 기준(OGP Participation & Co-Creation Standards) 최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한 눈에 보기

참여 시작 연도: 2011
공약 수: 10

공약 개관:
열린정부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공약: 8(80%)
성과 잠재력이 상당한 수준인 공약: 2(20%)
유망 공약: 3

정책 분야:
이전 실행계획에서 계승된 분야:
- 공익신고자 보호
- 공공데이터
- 시빅테크(civic tech)

디지털 포용 이 실행계획의 새로운 내용:
-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 혐오표현
- 사회적 포용이라는

OGP 참여 및 공동생산 기준 최소 요건 준수: 아니오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못하였다. OGP 는 업데이트된 기준으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전환을 위해 유예기간을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여 24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2023 년 8 월 31 일에 공동생산되고 제출되었으므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실행계획은 거의 1 년 간의 협의 과정으로 인해 이전 계획보다 수립과정이 길었다. 덕분에 시민사회가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일부 이해관계자는 언급했다.[2] 정부는 1 년의 공모 기간 동안 국민 제안 51 개, 정부 제안 37 개를 받았다. OGC 는 이 중 열린정부 가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공약 49 개를 추렸다.[3] 추려진 공약들은 OGC 의 기획, 반부패, 디지털, 시민참여 관련 네 개 소위원회에서 각각 네 차례의 논의를 통해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22 개 공약의 초안이 수립되었다. 대부분의 회의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 외에 다른 공공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각 소위원회 4 차 회의에만 타 유관 기관들이 참석하고[4] 정부 플랫폼을 통해 서면으로 정보를 공유하였다.[5] 담당 정부 기관인 행안부가 정부 및 비정부 의견을 취합하였다. 정부는 전보다 정부 참여가 확대된 열린정부기간 공개 토론을 2 주간의 공개협의로 진행하고 OGC 토의를 거쳐 최종 10 개 공약을 승인하였고 이 중 세 개(3, 7, 8)는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공약이고 한 개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제안한 공약(1)이다..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와 비정부 이해관계자 간 보다 직접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비 OGC 구성원도 소위원회 토의에 초청하면 향후 공동생산 과정 참여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6] 또한 모든 국민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도 공동생산 과정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실행계획 이행기간 중간 시점에 이뤄질 리프레시(refresh) 기간[7] 및 차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세 개의 유망 공약이 있다. 공약 2 는 행정심판 재결 시스템의 유용성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권익침해 구제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몇 개 안 되는 공약 중 하나인 공약 3 은 개방된 정부 데이터 양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시민들이 발견한 정부 데이터 제공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약 1 을 통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공약의 반부패 성과 잠재력을 개선하려면 입법 노력 외에 공익신고자 제도의 집행 및 사회적 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나머지 공약의 경우 열린정부 성과 잠재력이 명확하지 않다. 사회적 포용에 관한 공약 대부분이 OGP 가치와의 관련성이 적거나 부재하다.(5, 7, 9)이 공약들은 소외계층의 광범위한 사회적 참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민이 정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OGP 정관에 따르면 OGP 의 시민참여 가치와 관련성 있는 공약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공개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보다 신속하고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8] 일반적인 참여 역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약 4, 6, 8, 10 의 경우 OGP 가치와 관련성은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뿐 기존 관행 대비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이 첫 번째 4 개년 계획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IRM 은 공약의 성과 잠재력과 OGP 관련성 강화를 위한 개정 절차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개정은 실행계획 제출 후 1 년까지 허용된다.[9] 공약 개정을 통해, 이행 기간 중 수행할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보다 상세히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OGP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공약은 소외계층이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정보 개방 목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공약은 기존의 노력을 확대하거나 더 제도화한다는 목표로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OGC 는 공동생산 기간 중에 시민사회가 옹호했던 제안 가운데 보다 야심찬 공약(사실적 명예훼손 비범죄화 또는 에너지 데이터 개방 등)을 채택하거나 이전 실행계획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공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획 소위원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숙과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OGP 가치와 관련 있는 보다 도전적인 과제 선정이 중요하다.[10]

---

[1] 2024 년 2 월 기준으로 열린정부위원회는 정부대표 8 명, 대학, 싱크탱크, 민간부문 대표 14 명, 시민사회 대표 1 명 등 23 명으로 재구성됐다. 참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https://innovation.go.kr/ucms/main/contents.do?menuNo=300165# (2024. 3. 21. 접속).

[2]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IRM 연구원 인터뷰, 2023. 11. 17.; 권오연(사단법인코드), IRM 연구원 인터뷰, 2023. 11. 24.; 박지환(오픈넷), IRM 연구원과의 서신 교환, 2023. 12. 4.

[3] "열린정부위원회 제 6 차 국가실행계획 정부/국민 제안 1 차 평가 결과",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2023. 3. 8.

[4] 행정안전부가 IRM 에 OGC 소위원회 공동생산 회의록 접근권 제공

[5] 국민 의견 수렴 기간 중 행정안전부 의견, 2024. 4. 18..

[6] 박지환(오픈넷), IRM 연구원 인터뷰, 2023. 10. 18.; 이, 인터뷰, 권, 인터뷰.

[7] 리프레시 기간은 이해관계자들이 4 개년 실행계획 이행을 검토하고 향후 조치들을 평가하며 야심찬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 '정관', 열린정부파트너십,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articles-of-governance.

[9] "OGP 국가 안내서(OGP National Handbook)", 열린정부파트너십, 2022,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ogp-national-handbook-rules-and-guidance-for-participants-2022.

[10] "기획 소위원회 2 차 회의록",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2023. 3. 14.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섹션 II: 대한민국 2023~2027 실행계획 유망 공약

다음 검토에서는 IRM 이 판단하기에 성과 실현 잠재력이 가장 큰 세 가지 유망 공약을 살펴본다. 유망 공약은 이해관계자나 국가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분야를 다루고 있는 공약이다. 이러한 공약은 검증가능하고 적절한 열린정부 관점을 담고 있으며 보통 또는 상당 수준의 성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검토는 또한 도전과제 및 기회 분석,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이번 실행계획의 이행 및 학습 과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1. 유망 공약

유망 공약
1. 반부패 공익 신고 보호 및 지원 강화: 동 공약은 공익 신고 보호 및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공약 목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다양한 유형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타 네 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 및 확대: 동 공약은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권익 침해 구제를 받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약을 통해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여 복잡한 행정심판 시스템을 보다 유용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동 공약은 공개되는 정부 데이터 양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약을 이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미공개하고 있는 상당량의 데이터 목록을 개방하고 개방 대상 데이터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공약 1: 반부패 공익 신고 보호 및 지원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공약 전체 설명은 대한민국 2023~2027 실행계획 공약 1 참조: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republic-of-korea-action-plan-2023-2027-june

추진배경 및 목표

본 공약은 다양한 유형의 공익신고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고 보호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안한 이 공약은 이전 실행계획에서 했던 노력을 계승하는 것이다. 공약은 공공부문 부패 관련 공익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2008 반부패법과 민간부문 공익 침해 관련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2011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시작된 입법 궤적을 이어갈 것이다.[1] 10 여년의 개혁을 통해 개인정보 공개 금지, 경찰 보호 제공, 공익신고로 인한 해고 또는 재정 손실 금지 및 기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점진적으로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강화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보호 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 수도 2011 년에서 2023 년까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공된 보상금 및 구제금도 증가하였다.[2]

성과 잠재력: 보통

본 공약은 지속적인 공익신고자 관련 법 개정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책임성 진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약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를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익위는 또한 2011 년 180 개에서 현재 492 개로 늘어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보호가 적용되는 법률을 19 개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3] 또한 공약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익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개 법을 개정하여 보상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며 해당 다섯 개 법은 (1) 공익신고자 보호법, (2) 부패방지권익위법, (3) 부정 청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4) 부정 청구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5) 이해충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익신고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권익위,[4] 한국투명성기구,[5] 국회,[6] 일부 민간 변호사[7]에 따르면 공약이 목표로 하는 법 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 합리화에 기여하면서 공익신고 및 부패 근절을 장려할 것이다.

기존의 입법조치로도 이미 공익신고가 증가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접수된 부패 행위 사례도 증가하였다. 공익 신고는 2011 년 2,821 건(부패 행위 2,529 건, 공익 침해 292 건)에서 2023 년 9,858 건(부패 행위 6,853 건, 공익 침해 3,005 건)으로 증가하였다. 2002 년 전 국가청렴위원회(권익위 전신) 설립 이래 2023 년 말까지 부패 행위 신고로 5,579 명이 기소되었고 5,592 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2011 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이래 2023 년 말까지 23,962 건의 공익 침해 신고 중 11,434 건의 공익 침해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8]

한편 한국투명성기구와 정의연대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9]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9 년 5 월부터 2021 년 4 월까지 조사한 보호 조치의 1/3 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공익신고자의 1/3 이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조사된 기관 가운데 보호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31 개 사례 중 실제로 권익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5 건에 불과하였다.[10] 한편 2019 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처리 기간과 철회율이 늘고 있고[11] 보호 신청 건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12]

부패 행위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기소 위협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고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로 남아있는 대한민국 명예훼손법도 주요 걸림돌로 심지어 사실 기반 정보를 공개해도 처벌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대상이 될 수 있다.[13] 한국투명성기구는 대한민국이 법률 강화 외에 공익신고자 제도의 이행, 집행, 사회 전반의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14] 그러지 않는 이상 제안된 법률 개정의 공익신고 및 부패 방지 증진 성과는 보통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행 기간 중 기회, 도전과제 및 권고사항

본 공약은 공익신고자 보호 법령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법적 보호와 함께 보다 강력한 이행과 집행, 공익 신고자를 공익 수호자로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역학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약을 강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정부는 특히 법원 및 검찰의 공익신고자 보호 집행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주의한 정보 공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적용하여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전 실행계획에서 추진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2 조(4 항)가 개정됐다.[15].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배척을 고려했을 때 신분 공개 위험은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업하여 책임 규명 메커니즘 및 추가로 제정된 보호 및 보상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공익신고 관련 공익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 및 홍보자료를 통해서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동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사회 민관 협의회(국가 및 지방) 및 청렴사회 협약 서명에 대한 권익위의 지원이 지속·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실행계획에서 동 협의회 및 협약 지원에 관한 공약이 있었지만 현재로서 지속 여부는 미지수다.

공약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 및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통합기획단

본 공약 전체 설명은 대한민국 2023~2027 실행계획 공약 2 참조: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republic-of-korea-action-plan-2023-2027-june.

추진배경 및 목표

본 공약은 정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대한민국 행정심판 제도 활용 촉진 및 확대를 목표로 한다.[16] 권익위는 본 공약을 OGP 실행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OGC 반부패 소위원회 시민사회 위원 전원이 이를 지지하였다.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헌법과 행정심판법 적용을 받는다. 민원 및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은 권익 침해를 입은 시민이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수단 중 하나다. 민원과 달리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갖는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17] 행정심판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60~90 일인 반면 행정소송은 첫 재판에 이르기까지 평균 289 일이 소요된다.[18] 게다가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불법 여부뿐 아니라 부당성 검토도 이뤄진다. 2022 년 전체 행정심판 중 일반 사건은 21,450 건으로 인용률이 8.6% 였고[19] 조세심판 사건은 10,373 건으로 인용률이 12% 였다.[20]

성과 잠재력: 상당한 수준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민권 구제 수단임에도 시민들은 123 개 행정심판 기관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57 개 일반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이 행정심판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특허심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별법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특별 행정심판 위원회가 66 개 있다.[21] 시민들은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적절한 기관을 선택해야하며 기관마다 다른데다가 비 법률 전문가에게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모든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공약은 빅데이터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인 이지행정심판을 2 단계에 걸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차로 2022 년 12 월 57 개 일반 행정심판 기관이 이지행정심판으로 통합되었다. 이 기관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지행정심판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2 차로 전체 행정심판 기관 123 개가 이지행정심판으로 통합되어 2025 년 12 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본 공약의 목표는 청구인이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서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청구 목적, 사건 요약, 청구인 주장을 자동으로 완성해준다.[22] 본 공약은 또한 행정심판 사례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년 6 월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복수 부처(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다중이해관계자(정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로 구성된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발족하였다.[23]

본 공약이 공공 책임성 진전을 가져올 잠재력은 상당한 수준이다.[24] 시민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정부 행동(또는 비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 공약이 이행되면 행정심판 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간소화하여 국민의 행정심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을 통해 기관 및 인력 중복 문제도 해결되어 정부 운영 효율성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 2022 년 기준 행정심판기관의 부분적인 통합만으로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약 60%가 이지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25] 전체 123 개 행정심판기관이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통합되면 행정심판 청구율 및 인용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합 노력은 2023 년 국민 설문조사에서 80%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2022 년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은 정부 문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27]

이행기간 중 기회, 도전과제, 권고사항

123 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한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은 대대적인 일이다. 효율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일부 절차를 통합하면서도 특수 행정심판 분야(노동, 토지, 보험, 조세 등)에서 요구되는 전문성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28] 따라서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획단은 행정심판기관들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관 기관, 국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뜻밖의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29] 또한 수많은 법들이 행정심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 및 국회 공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IRM 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이행기간 동안 행정심판통합기획단에 중심 역할을 부여하고 의견 청취 기회를 보장한다. 특히 기획단은 이행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사용자 니즈에 대해 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행정심판 절차 및 이지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권익 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을 기반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약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까지 공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오픈데이터포럼

공약 전체 설명은 대한민국 2023~2027 실행계획 공약 3 참조: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republic-of-korea-action-plan-2023-2027-june.

추진배경과 목표

데이터 공백을 파악하고 채운다는 본 공약은 대한민국 공공데이터의 열린정부 효과를 심화하기 위해 OGC 디지털 소위원회 시민사회 위원이 제안한 공약이다. 대한민국은 2013 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래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2022 년 말 기준 대한민국 정부는 77,000 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였고(2023 년 기준 87,000 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 이는 2013 년 대비 15 배 증가한 것이다.[30] 2013 년 이래 민간의 공공 정부 데이터 활용이 3,300 배 이상 증가하여 2022 년 3,155 만 건(데이터 및 오픈 API 다운로드 건수)에 달했다.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정부는 정부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국가중점데이터개방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하며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민 및 기업 대상 설문조사 의견 등 다중이해관계자 절차에서 국민에게 우선순위라고 파악된 데이터 묶음을 개방한다. 그 후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대표로 구성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국가중점데이터 주제를 선정한다.[31] 2015 년 이래 국가중점데이터 묶음 168 개(2015~2016 년 33 개, 2017~2019 년 63 개, 2020~2022 년 72 개)가 개방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2015~2020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데이터 개방 부문 1 위를 차지하였다.[32]

성과 잠재력: 상당한 수준

본 공약을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당량의 데이터가 개방될 것이다. 데이터 개방에 앞서 국민에게 유용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참여중심 과정이 있을 것이다. 실행계획에 개방 대상 데이터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2023 년 4 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미공개로 되어 있는 정부 데이터(263,342 건)의 40.6%(106,930 건)를 2025 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데이터개방계획 초안이 발표되었다.[33] 시민 참여가 국민 데이터 활용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OGC 구성원으로 있는 두 시민사회 기관인 한국투명성기구와 오픈넷은 본 공약이 이번 실행계획에서 가장 유망한 공약 중 하나로 보고 있다.[34] 공동생산 기간 중 OGC 디지털 소위원회 위원들은 여성, 장애인, 에너지 관련 공공데이터 공백을 강조하였고 이 중 에너지 관련 데이터 개방은 시민의 기후행동 참여에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사실 일반인은 정부가 이러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공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디지털 소위원회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본 공약은 국민에게 보다 관련성 있고 유용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이 정보를 기반으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강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35]

본 공약은 또한 향후 두 차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을 세부계획으로 포함하고 있다. 4 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2023~2025 년 32 개 데이터 묶음이 개방될 예정이며 5 차 계획에서 2026~2028 년 목표가 수립될 예정이다.

이행 기간 중 기회, 도전과제, 권고사항

본 공약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이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정부 데이터 개방을 넘어 미공개 공공데이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이 유용하다고 보는 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 요소가 현재 작성된 세부계획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본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IRM 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 본 공약에 따른 데이터 개방 목표를 명확한 수치로 설정하고 <정부 중장기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참조 링크를 분명히 제시한다.
-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 개방을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킨다.
-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공백을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명시한다. 국가중점데이터 묶음 선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방하면 가장 유용할 데이터를 결정하는 데도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을 통한 보다 폭넓은 시민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공공데이터 사용자 친화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류 및 정리하고 제시한다.

기타 공약

다음 검토는 IRM 이 유망 공약으로 선정하지 않은 공약들에 관한 검토다. 본 검토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의 이행 및 학습 과정에 기여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 실행계획 공약 중 3 개(5, 7, 9)는 열린정부 가치와의 관련성이 적거나 부재하하다. 이러한 공약은 소외계층의 광범위한 사회 참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이 정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없다. OGP 정관에 따라 공약이 OGP 의 시민참여 가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공개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고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36] 일반적인 참여 역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공약은 소외 계층이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정보 개방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열린정부 관점을 강화할 수 있다. 디지털 접근성 확대에 관한 공약 5 는 국민이 디지털 정부 행정서비스 관련 의사결정이나 책임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OGP 가치에 부합하는 공약이 될 수 있다. 혐오표현에 관한 공약 7 의 경우 정부의 혐오표현 관련 정책 및 혐오표현 근절 방안 관련 의사결정에서 국민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공약의 열린정부 관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 및 혐오표현 대응 계획 개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하고 있는 기존의 활동을 기반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이 용이한 관광 시설 설계에 관한 공약 9 는 어떤 시설을 구축하고 시설을 설계할 때 유니버설 접근성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 국민과의 협의를 확대한다면 OGP 가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공약(4, 6, 8, 10)은 OGP 가치와 관련성이 있지만 노력의 확대나 제도화 강화를 위한 세부 목표 수립 없이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공약이다. 공약 4 는 정부가 기존의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약 6 은 오픈데이터포럼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해결방안 모색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공약들은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부가 시민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다. 공약 6 의 성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려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오픈데이터포럼 활동 및 리빙랩의 범위와 자원을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설계에 관한 공약 8 도 기존의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인프라 사업 관련 정부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공약 10 의 경우 이행 담당자들이 4 년의 기간 동안 소외계층의 언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거나 접근성 있는 방송에 관한 정부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1] "제 5 차 열린정부 실행계획(2021~2023) 추진 실적",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2023. 8. 30.,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34/view.do?nttId=13008&sort=01&menuNo=300193&searchCnd=&searchType=5&searchWrd=&requestURI=%2Fucms%2FpcyDta%2FpcyDta%2Fsearch.do&groupId=pcyDta&lcnt=10&searchKeyword=&pageIndex=1,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IRM 연구원과의 서신 교환, 2023. 11. 15.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백서", 2023, https://www.data.go.kr/data/15033709/fileData.do; "2022 국민권익위원회 연례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2021. 10. 1., https://www.acrc.go.kr/synap/skin_v2022_21.10.1/doc.html?fn=16892865424431.pdf&fno=2022%20ACRC%20Annual%20Report.pdf&rs=/synapfile/64/202401.

[3] 국민권익위원회, 서신 교환.

[4] 국민권익위원회, 서신 교환.

[5]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IRM 연구원 인터뷰, 2023. 11. 17.

[6] "국회도서관, 내부고발자 보호 확대·강화...공익 수호자로 역할 할 것", 독서신문, 2023. 9. 6., https://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659.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 주년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백서", 2023, https://www.data.go.kr/data/15033709/fileData.do.

[9] 이, 인터뷰; 김은해, "정의연대"명예훼손죄 비범죄화"민사로 통합해야", 인디포커스, 2022. 1. 3., http://www.indifocus.kr/34871.

[10]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 제대로 되고 있나「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10 년", 2021. 10. 1., https://www.peoplepower21.org/pspdarchive/1824192.

[11] 이재혁, "'신고자 스스로 보호 포기'...권익위 보호신청, 평균 처리기간 늘자 취하율 '급증'," 2023. 10. 10.,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2197106557

[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백서", 2023, https://www.data.go.kr/data/15033709/fileData.do.

[13] 이, 인터뷰; 김, "정의연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민사로 통합해야."

[14] 이, 인터뷰.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2 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033&lsId=&efYd=2024020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16] 박종민, "행정심판, 불편한 진실", 법률신문, 23 July 2023. 7. 23.,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9527; Kim Eun-jin, ""어디로 가야 하죠" 번지수 헷갈리는 행정 심판 기관, 하나로 뭉친다", YTN 라디오, 2023. 8. 4., https://m.radio.ytn.co.kr/interview_view.php?id=90845&s_mcd=0433.

[17] "투명성 및 시민권 관련 큰 진전"; "행정심판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민국 국회, 2019. 12.,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ml5uR8feDAxWXIkQIHXrsB-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MQFnoECA4QAQ&url=https%3A%2F%2Fopen.assembly.go.kr%2Fportal%2Fdata%2Fsheet%2FdownloadFileData.do%3FinfId%3DO8685D0008489413266%26infSeq%3D1%26fileSeq%3D1%26dataSeqceNo%3D123003509&usg=AOvVaw337X8NGY8r2FAR-y5dBGHi&opi=89978449; ""원스톱 행정심판 확대해야"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법률신문, 2023. 1. 14., https://www.lawtimes.co.kr/news/184553.

[18] "투명성 및 시민권 관련 큰 진전"; "행정심판제도 개선방안 연구."

[19] "2022 국민권익위원회 연례보고서"; "중앙행정심판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s://www.simpan.go.kr/nsph/sph240.do.

[20] "최근 5 년간 조세심판 처리현황", 지평, 2023. 4. 4., https://www.jipyong.com/newsletter/tax/230404/230404_1.pdf.

[21] "행정심판제도 개선방안 연구"; "투명성 및 시민권 관련 큰 진전"; "행정심판, 불편한 진실."

[22] "행정심판, 불편한 진실"; "어디로 가야 하죠" 번지수 헷갈리는 행정 심판 기관, 하나로 뭉친다".

[23] "행정심판, 불편한 진실".

[24] 이, 인터뷰; "어디로 가야 하죠" 번지수 헷갈리는 행정 심판 기관, 하나로 뭉친다"; "원스톱 행정심판 확대해야"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25] "어디로 가야 하죠" 번지수 헷갈리는 행정 심판 기관, 하나로 뭉친다".

[26] "국민 10 명 중 8 명, '행정심판 통합' 찬성", DWB 뉴스, 2023. 9. 1., https://www.dw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5398.

[27]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제 1 회 문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2023. 12. 6., https://www.acrc.go.kr/board.es?mid= a10402010000&bid=4A&list_no=43138&act=view.

[28] "어디로 가야 하죠" 번지수 헷갈리는 행정 심판 기관, 하나로 뭉친다"; "'행정심판 통합', 법조·학계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네이버, 2023. 10. 12., https://blog.naver.com/ash1106219/223234056841.

[29] "원스톱 행정심판 확대해야,'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이, 인터뷰.

[30] "공공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6/b02/open Data/screen.do; 박현진, "'공공데이터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행안부-NIA, 공공데이터법 제정 10 주년 기념식 및 발전 심포지엄 개최", 인공지능신문, 2023. 10. 18.,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9140.

[31] 임혜정, "공공데이터로 투명성 개선 및 성장 촉진(Open data to improve transparency and drive growth)," 열린정부파트너십, 2023. 3. 13., https://www.ogpstories.org/open-data-to-improve-transparency-and-drive-growth.

[32] "공공데이터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행안부-NIA, 공공데이터법 제정 10 주년 기념식 및 발전 심포지엄 개최".

[3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록,"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2023. 4. 10.

[34]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IRM 연구원과의 서신 교환, 2023. 11. 24.; 박지환 (오픈넷), IRM 연구원과의 서신 교환, 2023. 12. 4.

[35] "디지털 소위원회 1 차 회의록,"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2023. 3. 3.

[36] "정관," 열린정부파트너십,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articles-of-governance.

섹션 III. 방법론과 IRM 지표

본 보고서는 실행계획의 보다 강력한 이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계획의 특징과 함께 IRM 이 확인한 강점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독립적인 기술 검토 보고서다. IRM 은 성과를 낼 잠재력이 가장 크거나 국가 이해관계자의 우선과제이거나 국가 열린정부 맥락에서 우선 과제로 인정되거나 이 모든 요소에 다 해당되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실행계획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IRM 보고서가 제공된다.

- **공동 생산 브리프:** 국가 OGP 과정, 실행계획 수립, 전반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IRM 보고서에서 얻은 교훈을 강조하는 간결한 보고서.
- **실행계획 검토:** 보다 강력한 이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계획의 특징과 함께 IRM 이 발견한 강점과 도전과제를 기술적으로 검토한 보고서.
- **중기 검토:** 중간 시점 개정(리프레시) 기간 후 4 개년 실행계획을 검토한 보고서. 동 검토에서는 개정된 실행계획에 추가되거나 상당 부분 개정된 공약, OGP 규정의 이행, 이행 과정 관련 비공식 업데이트 사항을 평가한다.
- **성과 보고서:** 정책 수준의 성과와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전반적인 이행 평가. 동 보고서에서는 OGP 규정 이행을 확인하며 책임성과 장기적 학습도 지원한다.

실행계획 검토에서 IRM 은 다음의 세 지표를 이용하여 공약을 검토한다.

1. 검증 가능성: IRM 은 실행계획에 기술되어 있는 공약 내용이 검증 가능한지 판단한다. 지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예/아니오:** 제시된 목표와 제안된 행동이 충분히 명확하며 이행 평가를 위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은 검토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열린 정부 관점: IRM 은 공약이 투명성, 시민참여, 공적 책임 등 열린정부선언(Open Government Declaration)과 OGP 정관(Articles of Governance)에 규정되어 있는 열린정부 가치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한다. 공약 본문의 정독 후 평가가 진행되며 지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예/아니오:** 공약에 정책 분야, 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참여 또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 의도가 담겨 있는가?

공약을 분석할 때 각 OGP 가치에 대한 다음의 질문을 참고하여 특정 열린정부 관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 **투명성:**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개방하거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또는 제도적 틀을 개선하거나, 국민에 개방되는 정보의 질을 개선하거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제도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인가?
- **시민참여:** 국민이 정책, 법 및 결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동 생산할 수 있는 기회, 절차 또는 제도를 정부가 만들거나 개선할 것인가? 정부가 소수, 소외 및 과소 대표된 집단을 위한 참여 제도를 만들거나 지원하거나 개선할 것인가?

  정부가 시민사회 지원 환경(NGO 법, 자금조달 제도, 조세, 보고 요건 등)을 개선할 것인가? 정부가 표현의 자유,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시민 공간 관련 법적, 정책, 제도적 또는 실질적 여건을 개선하여 공적 영역 참여를 촉진하려고 하는가?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실 기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온라인상의 허위정보 및 오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디지털 및 언론 문해력 캠페인, 사실 확인 또는 독립적인 뉴스 언론 생태계 촉진 등)를 취할 것인가?
- **공적 책임:** 정부는 공무원이 한 행동에 대해 문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개선할 것인가? 정부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정책 및 제도적 틀을 지원할 것인가?

3. 성과 잠재력: IRM 은 계획 이행 후 IRM 성과 보고서에서 검증될 기대 성과 및 잠재력을 분석한다. 성과 잠재력은 실행계획 내 공약 설명을 기반으로 공약이 현재 상황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을 조기에 보여주는 지표다. 지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불명확함:** 공약이 추가적인 가치나 기존 관행보다 향상된 열린 정부 접근방식을 제시하기 않은 채 기존의 법령, 요건 또는 정책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관행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보통:** 긍정적이지만 독립적인 절차, 관행 또는 정책 이니셔티브 또는 변화. 공약이 정부 전체 또는 해당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 전체에 대해 구속력 있는 또는 제도화된 변화를 창출하지 않는다. 툴(웹사이트 등), 데이터 공개, 훈련 또는 시범사업 등이 그런 예다.
- **상당 수준:** 관행, 정책 또는 해당 정책 분야 담당 기관, 공공부문 또는 시민과 국가 관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약. 공약이 범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고 제도화된 변화를 창출한다.

본 검토에서는 유망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유망한 공약이란 검증이 가능하고 열린정부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통 수준 이상의 성과 잠재력이 있는 공약이다. 유망한 공약이 국가 이해관계자에게나 특정 상황에서 우선과제일 수도 있다. IRM 은 정책 목표가 같거나 동일한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개혁 또는 정책 사안에 기여하는 공약들을 군집 분류할 수 있다. 군집 분류된 공약들의 성과 잠재력 검토는 전체적으로 이뤄진다.

본 검토는 연구를 담당한 Nancy Y. Kim 과 외부 전문가로서 검토를 담당한 Thomas Kalinowski 와의 협업으로 IRM 이 작성한 보고서다. IRM 은 본 보고서의 내부 검토 기간 동안 동료 평가, 필요할 경우 OGP 지원 부서(OGP Support Unit)의 의견 수렴, 국가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및 유효성 확인, 외부 전문가 검토, IRM 국제전문가패널(International Experts Panel, IEP)[1]의 감독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IRM 의 방법론, 보고서 품질, 검토 절차에 대한 감독은 IEP 가 수행한다.[2]

[1] "국제전문가패널(International Experts Panel)," 열린정부파트너십, 2024. 7. 15. 접속,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about/who-we-are/international-experts-panel.

[2] 자세한 내용은 "개요-독립보고메커니즘(Overview –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린정부파트너십, 2024. 7. 15. 접속,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irm-guidance-overview.

부속서 1. 공약별 데이터

공약 1: 반부패 공익 신고 보호·◌지원 강화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정부 관점이 있는가? 예
- 성과 잠재력: 보통

공약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정부 관점이 있는가? 예
- 성과 잠재력: 상당한 수준

공약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 정부 관점이 있는가? 예
- 성과 잠재력: 상당한 수준

공약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 정부 관점이 있는가? 예
- 성과 잠재력: 불명확함

공약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 정부 관점이 있는가? 아니오
- 성과 잠재력: 불명확함

공약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 해결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 정부 관점이 있는가? 예
- 성과 잠재력: 불명확함

공약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 정부 관점이 있는가? 예
- 성과 잠재력: 불명확함

공약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 정부 관점이 있는가? 예
- 성과 잠재력: 불명확함

공약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 정부 관점이 있는가? 아니오
- 성과 잠재력: 불명확함

공약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 검증가능성: 예(Yes)
- 공약에 열린 정부 관점이 있는가? 예
- 성과 잠재력: 불명확함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부속서 2: 실행 계획 공동생산

OGP 회원국들은 2022 년 1 월 1 일 발효된 OGP 참여 및 공동생산 기준(OGP Participation and Co-Creation Standards)의 목표를 전적으로 지향하도록 장려된다.[1] IRM 은 2022 년부터 실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국가들을 업데이트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표 2 는 각국의 참여 및 공동생산 관행이 실행계획 수립 기간에 적용되는 최소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OGP 는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24 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공동생산 및 제출된 실행계획은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다. IRM 은 각국이 기준 및 최소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평가할 것이다.[2] 그러나 2024 년 및 그 이후에 공동생산된 실행계획에 한해서만 해당 국가가 최소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절차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표 2. 최소 요건 준수

최소 요건	공동생산 중 준수되었는가?	이행기간 중 준수되었는가?
1.1 대화를 위한 공간: 공동생산 기간 동안 정부 위원 8 명, 시민사회 위원 10 명, 학계 및 민간부문 위원 12 명으로 열린정부위원회(Open Government Committee, OGC)가 구성되었고[3] 네 차례 회의가 열렸다. OGC 의 기획, 반부패, 디지털, 시민참여 관련 네 개 소위원회는 공동생산 기간 중에 각각 3~5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OGP 웹사이트에는 OGC 의 임무, 구성,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회의록 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4]	예	*중기 검토에서 평가될 예정*
2.1 OGP 웹사이트: OGP 웹사이트는 '혁신 24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접속 가능하며 최신 실행계획, OGP 및 OGC 관련 정보, 공개 토론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다.[5]	예	*중기 검토에서 평가될 예정*
2.2 리포지토리: OGP 리포지토리는 1 년에 두 차례 이상 업데이트된다. OGC 회의록, 열린정부주간 활동 관련 정보, 실행계획에 대한 국민 피드백 요청사항 등이 리포지토리에 게시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제출한 공약 제안, 이러한 제안에 대한 OGC 답변, 소위원회 회의록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OGP 웹사이트에는 리포지토리로 연결되는 링크가 없었고 링크가 있었더라면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리포지토리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6]	예	*중기 검토에서 평가될 예정*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3.1 사전 공지: 정부는 2022 년 9 월 27 일, 2022 년 10 월 11 일 시작되는 제안 공모에 대해 2 주 전부터 공지하고 제안 논의 및 최종 결정 관련 간략한 일정도 제공하였다다 .[7]	예	*중기 검토에서 평가될 예정*
3.2 홍보: 정부 및 비정부 이해관계자 플랫폼과 언론매체를 통한 국민 참여 기회 및 공동생산 과정을 광고하는 대국민 홍보가 시행되었다.[8]	예	해당사항 없음
3.3 피드백 메커니즘: OGC 다중이해관계자 회의 외에 아이디어 공모전(2022 년 10 월 11 일~11 월 14 일), 열린정부주간(2023 년 5 월)에 제안된 공약에 관한 공개 토론, 실행계획 초안에 대한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 기간(2023 년 6 월 26 일~7 월 9 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수렴되었다.[9]	예	해당사항 없음
4.1 합리적인 답변: 공약 제안이 소위원회 공동생산 회의록에 기록되어 OGC 위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10] OGC 는 제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다. OGP 는 OGP 가치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약 제안을 제출한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후속 작업도 하지 않았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생산 과정에 계속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었지만 이들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공하지 않았다.[11]	아니오	*중기 검토에서 평가될 예정*
5.1 열린 이행: IRM 은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성과 보고서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평가할 것이다.	해당사항 없음	*중기 검토에서 평가될 예정*

대한민국의 제 6 차 실행계획 수립 과정은 OGC 가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OGC 참여 및 공동생산 기준의 최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실행계획은 4 년의 이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2 년 후 실행계획 리프레시 기간이 주어진다. 리프레시 기간은 이해관계자들이 실행계획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조치들을 평가하며 강력한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RM 은 중간 시점에 개정된 실행계획이 제출된 후 최소 요건 1.1, 2.1, 2.2., 3.1, 4.1, 5.1 의 이행을 평가할 것이다.이 기간 동안 OGP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IRM 은 OGC 에 다음과 같이권고한다.

- 리프레시 기간 동안 의견을 낸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기록 및 보고하거나 서면 피드백을 게시한다.

[1] "2021 OGP 참여 및 공동생산 기준(2021 OGP Participation and Co-Creation Standards)," 열린정부파트너십,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ogp-participation-co-creation-standards.

[2] "최소 요건 평가에 대한 IRM 가이드라인(IRM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Minimum Requirements)," 열린정부파트너십,"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documents/irm-guidelines-for-the-assessment-of-minimum-requirements.

[3]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IRM 연구원 인터뷰, 2023. 10. 17.; 박지환(오픈넷), IRM 연구원 인터뷰, 2023. 10. 18.; 권오연(사단법인 코드), IRM 연구원 인터뷰, 2023. 10. 18.; "회의 기록,"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2021. 8. 27.

[4] "열린정부파트너십", 행정안전부, https://www.innovation.go.kr/ ucms/main/contents.do?menuNo=300165 (2023. 12. 15. 접속); "정책자료", 행정안전부, https://www.innovation.go.kr/ucms/pcyDta/pcyDta/search.do?searchType=5&menuNo=300193&sort=01&searchCnd=&pageIndex=1&searchWrd= (2023. 12. 15. 접속).

[5] "열린정부파트너십."

[6] "정책자료."

[7] "[안내] 제 6 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제안 공모 계획", 행정안전부, 2022. 9. 27.,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1/view.do? nttId=9826&menuNo=300115&pageIndex=1 (2024. 5. 3. 접속).

[8] "국제사회와 공유할 열린정부계획 국민제안 공모."

[9] "국제사회와 공유할 열린정부계획 국민제안 공모"; "[안내] 제 6 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제안 공모 계획"; "세계열린정부주간 '국민이 만드는 열린정부' 행사개최 안내", 행정안전부, 2023. 4. 26.,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34/view.do?nttId= 11101&sort=01& menuNo=300193.

[10] 행정안전부가 IRM 에 OGC 소위원회 공동생산 회의록 접근권 제공

[11] 행정안전부, IRM 과의 서신 교환, 2023. 12. 19.